



중국 고성장 유지, 구조적 변화 필요

왕양비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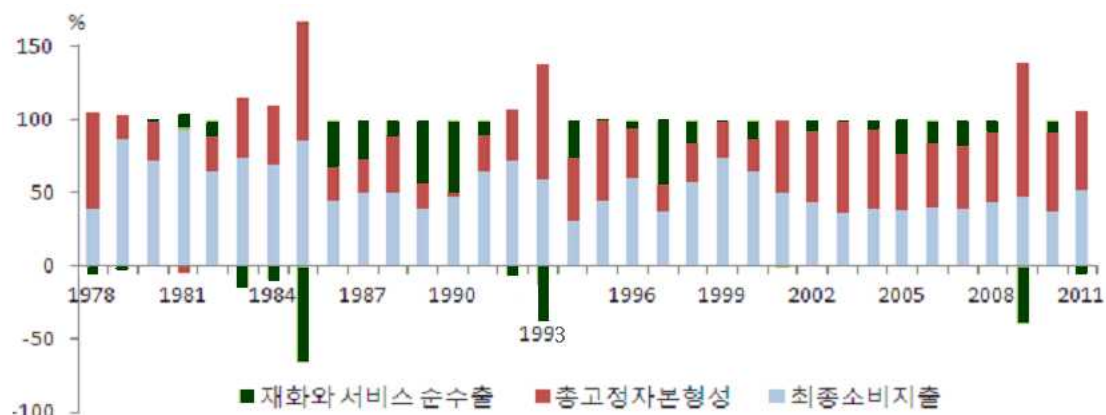
요약

■ 2011년 중국의 분기별 경제성장률은 수출 및 고정자산투자 성장세가 둔화됨에 따라 지속적인 하락세 (9.7%, 9.5%, 9.1%, 8.9%)를 보였음. 2012년 해외수요 부진이 지속되고 통화정책도 본격적인 완화기조로 전환되기 어렵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수를 확대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여 산업구조를 전환해야 함. 이에 따라 소득분배 개선, 빈부격차 축소, 사회보장 수준 제고, 중급 및 고급 기술 산업의 경쟁력 향상 등 제도적, 사회적, 산업적인 구조 개혁이 필요함.

■ 2011년 4/4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은 2009년 2/4분기 이래 처음으로 9% 이하로 떨어졌는데, 이는 중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과 고정자산투자의 증가세가 모두 둔화되었기 때문임.

●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008년 세계경제위기에서 회복하여 2009년 1/4분기 6.5%에서 2010년 1/4분기 11.3%로 높아졌으나, 이후 하락세를 보이면서 2011년 4/4분기 8.9%로 떨어짐.

〈그림 1〉 항목별 GDP성장 기여율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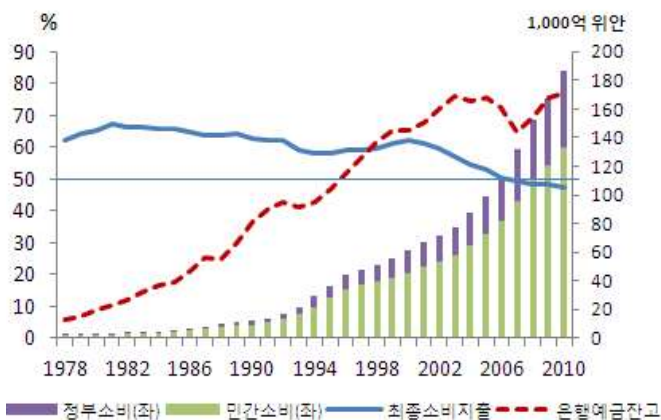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 유럽, 미국 등 주요 교역 대상국의 수요 감소에 따라 2011년 중국 재화와 서비스 순수출의 GDP 성장 기여율은 2009년(-38.9%) 이후 다시 마이너스(-5.8%)로 전환됨.
- 2010년 11월~2011년 6월 동안 기준율이 8회 인상되는 등 긴축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2011년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이 16.1%로 전년에 비해 3.4%p 하락했으며, 고정자본형성의 GDP성장 기여율은 54.2%로 2010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임.
- 이에 비해 2011년 최종소비지출의 GDP성장 기여율이 51.6%로 전년대비 14.8%p 상승하였는데, 최종소비지출의 증가율 상승이 수출부진과 고정자산투자 감소를 상쇄하는데 충분하지 못하여 2011년 중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은 2010년 10.3%보다 낮은 9.2%로 나타남.

■ 지속될 해외수요 감소세로 인해 내수중심으로 경제구조를 바꾸는 것이 중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새로운 전략 방향이나, 소비와 저축 간, 정부부문수입과 민간수입 간의 불균형이 내수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개혁이 필요함.

- IMF는 2012년 중국경제가 수출 부진으로 타격을 입을 것이며, 유럽 재정위기가 지속되고 내수가 확대되지 않은 경우 경제성장률이 7.8%~8.2%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
- 그러나 중국정부는 아직까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4조 위안에 달한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발생한 대량의 무수익여신과 불량채권, 부동산 거품 등을 해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확장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못할 것으로 보임.

〈그림 2〉 GDP대비 소비, 저축, 투자규모 규모 변화 추이



주: 1) 은행예금잔고는 해당 시점 전국은행 민간 예금의 합계치며, 기업, 군대, 정부기관 등 단체 예금과 개인이 소지하는 현금을 제외함.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

〈그림 3〉 GDP대비 재정수입 및 민간 임금보수총액 변화율



주: 1) 재정수입은 국내·외 채무 수입을 제외함.
2) 민간 임금보수총액은 정부부문 종업원과 중·외자 기업 직원의 모든 임금 및 실물 보수의 합계이며, 농민이나 자영업자의 비 임금수입과 영업수입 등을 제외함.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 최근 10년 GDP대비 최종소비지출비중 하락세가 가속화되어 2007년 50% 이하로 떨어졌으나, 최종소비지출 중 정부소비 비중은 25%에서 29%로 높아졌음.
- 사회보장체계가 아직 불충분하고, ‘한 자녀 정책(1983년부터 실행)’ 적용대상자가 50대로 들어가는 등의 이유로 중국 국민이 노후와 질병 등에 대한 걱정은 경제성장으로 해소되지 않았으며, GDP대비 은행예금잔고비율은 2008년을 제외하고 지속적 상승세를 보임.
- 정부부문 수입과 민간수입의 증가 속도 불일치는 중국국민의 가처분소득 증가를 제한하며, 이는 내수확대의 걸림돌로 작용
 - 1978~1996년 GDP대비 재정수입비율이 지속적 하락세를 보였고 이후에 상승세로 전환하여 2010년 22%에 달한 반면, GDP대비 민간 임금보수총액비율은 하락세를 보이면서 계속 10%대에 머물고 있음.

■ 또한,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빈부격차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중국경제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에 독점산업 진입체계 개혁, 시장경쟁 투명성 확보, 공무원 혜택 감소, 서민 민생 개선 등을 비롯한 정책적 개혁이 시급함.

- 정부와 민간 간의 수입 불균형뿐만 아니라, 석유, 전력, 통신, 금융 등 독점적 산업과 기타 경쟁 산업 간의 수입 불균형도 전체 소비능력 제고를 저해하며, 독점적 산업의 고수입, 정부부문의 고복지, 시장경제 활성화에 따른 부의 편중 등으로 중국의 수입격차가 급격히 확대됨.
 -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00년 중국의 지니계수가 0.4를 넘어 중등 불평등 국가의 단계에 진입하였고, 사회과학원에 따르면 2010년 동 계수가 이미 0.5를 넘어 중국이 고도로 불평등한 국가의 대열에 가입하였음.
- 1970~1990년 일부 남미국가들(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의 지니계수가 0.5를 초과한 이후 20여년의 경제 침체에 빠졌는데, 중국 경제도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적 불안정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함.

■ 마지막으로, 중국은 수출주도형 경제를 내수주도형 경제로 바꾸고 전체 국민소득 수준을 높여야 할 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는 등 산업구조를 전환해야 중진국함정(Middle-income countries trap)을 피해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할 수 있음. [kiri](#)